

# 김춘진 도당위원장, 최고위원 선임 관심

### 호남꽃 당연직에 선출되면 '김 위원장 체제' 구축 도움 될 것... '더 어려운 시험대 될 것' 전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김춘진 위원장의 최고위원 선임이 관심이다. 최근 진행된 전북도당 위원장 추대와 관련해서 긍정적, 부정적 평가가 교차하지만 호남꽃 당연직 최고위원에 선출되면 김춘진 도당 위원장 체제 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앞으로 전북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데 더 어려운 시험대가 될 것이라 관측도 만만치 않다.

#### ▲도당 위원장 순환... 위상 '강화'

김 위원장은 당초 김재, 부안 경선에서 수세에 몰릴 것이라 기대를 깨고 지역위원장 자리를 꿰찼다.

경선 승리의 기쁨을 누릴 새도 없이 곧바로 도당 위원장직을 놓고 김운덕 지역위원장(전주갑)과 경선할 것으로 보였지만 전당대회를 통해 추대받으면서 전북도당(號)의 키를 잡았다.

도당 위원장에 선출되면서 전북도당을 이끌고 갈 동력을 얻은 김 위원장은 "생활 정치로 도민신뢰를 되찾는데 노력하겠다"면서 혁신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런 가운데 유력한 최고위원으로 거론되면서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사실 최고위원회의는 당의 최고의사결정기구다. 전북출신 도당위원장이 최고위원직을 꿰차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천양지차다. 겉으로는 호남권 의원들을 대표한다지만 최고위원이 갖는 위상은 그 이상이다. 당의 지도부에 집합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중앙과 지역의 가교역할을 원활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엇갈린 평가도... 그래도 무난한 인물

김 위원장에 대해서는 엇갈린 평가도 나온다.

당 안팎으로 조직보다는 홀로 움직이는 정치꾼이라는 말까지 나돌았다.

여기에 지난 총선 패배 책임을 지지 않고 도당 위원장에 욕심을 부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에 제 목소리를 무난히 낼 수 있는 인물이란 옹호론도 적지 않다. 평소 애용을 떠나서 객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소신껏 입장을 표명한다는 것이다.

특히 3선 출신으로서 존재감이나 역량은 부정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많다. 한 정치권 인사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비난이 아닌 비판을 해서 옳은 자리로 이끄는 것이 국회의원 역할이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역할을 해왔다"면서 "최고위원직을 맡게 되면 충분히 변화와 화합뿐만 아니라 중앙당 실무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전북 역할론 최대 '숙제'... 지역위원장 간 회합도

도당 전당대회에서 심상치 않았던 갈등 조짐은 김 위원장이 풀어야 할 난제다. 도당 전당대회가 이전 분위기만큼 뜨겁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때문에 최고위원직 선임과 관련, 전북도당 지역위원장 간 화합이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지역위원장 간 갈등은 최악의 경우 공멸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가뜰이나 지역 정치인이 주요 이슈 발생 시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터다.

김춘진 위원장도 모를리 없을 것이다. 결국 김 위원장이 최고위원직 호선을 놓고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그의 정치 인생에서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편 더민주 최고위원은 서울·제주·인천·경기·영남·호남·강원·충청 7개 권역에서 1명씩을 시·도당위원장 가운데 호선으로 선출할 예정이다. /신광영 기자

## 정진숙, 국민의당 도당 사무처장 선임



국민의당 전북도당(위원장 김광수)은 18일 신임 사무처장에 정진숙 전 도의원을 임명했다. 사상 첫 여성 도당 사무처장에 임명된 정진숙 처장은 2006년 민주당 여성국장으로 당직을 시작해 제9대 전북도위원을 역임했다.

특히 그는 도의원 재직시 소신과 의원으로 정평이 나왔다. 정 신임처장은 "엄중한 정국에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며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강한 야당을 만들어 집권여당이 될 수 있도록 당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처장은 전주 출신으로 전주여고, 전북대를 졸업했다. /신광영 기자

## 도의회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 간담회

전북도의회는 18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라북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와 '전라북도 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국주영은 의원과 YMCA 등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했다.

간담회는 전북도의 평화통일 교육 활성화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자유·민주 가치의 실현,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 6.15남북공동선언 및 10.4남북공동선언의 실현, 개인적·당파적 이해의 배제, 지역사회 통일환경 기반 구축 등 기본 방향이 논의됐다.

한편 이번에는 논의된 내용은 오는 9월 5일부터 열리는 제33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서 발의될 예정이다. /신광영 기자

## 여야, 청문회 정국 돌입... 험로 예상

여야가 조선·해운산업 청문회, 이른바 '서별관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로 정면 격돌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물론, 관련 상임위가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18일부터 본격적인 '청문회 정국'이 시작되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여야는 이날 김재중 대표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를 시작으로 19일에는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추경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2일로 예정돼 있고, 다음날부터 25일까지 조선·해운산업 청문회를 실시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른바 '서별관 청문회'에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 등 박근혜 정부 경제 실세들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증인 채택을 거부하면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야당의 증인 채택 요구를 정치공세라고 일축하며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먼저 처리한 후 조선·해운산업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8·16 개각에 따른 조운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조경규 환경부 장관·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다음 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뉴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7주기 18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7주기 추도식에서 합창단이 고인의 넋을 기리며 '당신은 우리입니다'라는 제목의 추모 노래를 합창하고 있다.

## 정운천 "새만금 남북2축도로 예산확보 중요"

### "교통인프라 핵심 축인 만큼 내년예산에 500억 이상 반드시 반영돼야"

국회 정운천(새누리당, 전주을)의원은 새만금 개발사업 중 남북2축도로 예산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남북2축 도로로는 새만금 교통인프라의 핵심 축인 만큼 내년예산에 500억 이상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며 "남북2축도로가 건설돼야 동서도로와 함께 십자형 도로가 구축돼 새만금의 도로인프라를 완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새만금 도로 구축의 핵심 축으로 꼽히고 있는 남북도로의 경우 2010년 4월 완공된 방조제(남북1축) 외에 사업부지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남북2축도로(26.7km)도 지난해 기본계획 수립을 마치고, 현재 사업발주를 준비 중이다.

특히 이 가운데 남북2축도로는 현재 공사 진행 중인 동서2축 도로와 함께 새만금의 중앙에서 만나 십자형 입체도로를 형성할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기재부는 국가재정에 부담된다는 이유로 동서2축과 남북2축을 동시 추진하는 것에 난색을 보이며, 남북2축도로 설계비 명목으로 국토부가 올린 57억 원마저 반영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정책집의를 통해 "올해 남북2축도로 건설비로 확보된 21억의 공사비를 발주해야 내년 남북2축 도로건설 예산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광영 기자

## 추미에 '김종인 지도체제 끝났어야'

추미에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18일 당 강령 중 '노동자' 문구 삭제 논란과 관련, "역시 빨리 과거 지도체제를 끝냈어야 했고 전당대회를 미리 해서 정당 당을 제대로 대선준비를 했어야 이런 논란이 없었을 것"이라며 거듭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를 공격했다.

추 후보는 이날 오전 PBC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인터뷰에서 "이것(노동자)에 대한 삭제는 있을 수가 없었던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신을 비롯한 당 대표 후보들의 문구 삭제 반대 입장을 문제 삼은 김 대표를 겨냥, "우리가 중산층과 서민, 근로자를 위한 정치를 구현한다면서 근로자를(강령에서) 뺐 것이 그냥 말шиб러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며 "이 문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또 그런 실수가 용납되는 것이 아닌 게 정당"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과도하게 비대위에서 당을 이끌든 아니면 앞으로의 전당대회에서 당을 이끌겠다는 분이든 누구나 분열을 선포하고 열매를 나눠먹는 나약한 정당의 자부심을 무너뜨리는 일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야권 통합) 그런 의지를 받들지 못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추 후보는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에 기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느 누구에게 의해서든 당 대표 경선을 해본 적이 없다. 또 앞으로도 그럴 리가 없다. 대선주자는 누가 국민 지지를 많이 받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라며 "(대선후보경선은) 당 대표가 순위를 좌지우지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뉴스

## 공개? 비공개?... '오락가락' 새누리 회의

### '최고위' 비공개 · '최고중진간담회' 공개... 원내대책회의는 공개

'이정현 체제' 이후 새누리당 공식 회의가 공개와 비공개를 두고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 대표와 원내대표 발언만 공개하겠다고 하다가 이마저도 비공개로 한다고 바꾸더니 다시 원내대표 발언은 공개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이다.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는 정진석 원내대표 발언 외에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정현 대표는 "원내대표 말씀을 듣고 회의를 비공개로 하겠다"는 것 외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이날 정 원내대표 발언이 공개된 것은 지난 11일 이 대표가 통과한 '전면 비공개' 방침과는 다른 모습이다. 이 대표는 취임 첫날인 10일 열린 최고위에서 당 대표, 원내대표만 공개 발언을 하고 최고위원들의 발언은 비공개 한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정책적 이슈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최고위원들이 공개 발언할 수는 있으나, 정치 사안이나 당내 문제에 대해서는 비공개 토론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후 조율되고 정제된 내용을 당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다는 것이 이 대표의 방침이었다.

이 대표는 그러나 11일 주재한 두번째 최고위에서는 대표, 원내대표 발언은 공개하겠다는 전날 방침을 접고, 전면 비공개 방침으로 회의 진행방식을 또다시 바꾸었다. 대표, 원내대표만 발언하고 최고위원들은 발언하지 못하게 하느냐는 형평성 논란 때문이었다.

이 대표는 그러나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은 얼마든지 기자실에, 마이크는 항상 켜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말할 수 있다"며 "또 다른 당직에서 상

세한 브리핑을 할 내용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말할 수 있다"고 회의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17일 이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최고중진연석간담회는 전면 '공개'로 진행됐다. 이 대표는 "앞으로 최고중진연석회의는 전체를 간담회 형식으로 하겠다"며 "특별한 사안 아니면 모두 발언을 다 공개하고 중진의원들께서 공개적으로 주신 말씀들을 함께 다 공유하자"고 말했다.

이후 정진석 원내대표를 포함, 심재철 정감은 강길부 정우택 신상진 김재경 나경원 조정태 의원 등 참석 중진 의원들의 공개 발언이 이어졌다. 그간 공식 회의에서 발언이 제한됐던 조원진 이정우 강석호 최연태 유창수 최고위원도 기다렸다는 듯 전면 한마디씩 공개 발언에 나섰다.

한편 정진석 원내대표가 주재하는 원내대책회의는 이정현 대표 출범 이후에도 공개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회의가 공개인지 비공개인지 우리도 헷갈린다"고 혼란스러운 회의 진행 방식을 꼬집었다. /뉴스

## 문재인 "야권, 정권교체 위해 뭉쳐야 될 것"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7주기를 맞아 "반드시 내년 대선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지를 자랑스런 민주정부의 정통성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추도사를 대신해 배포한 글에서 "지금 국민들이 김 전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이유는 희망을 주는 정치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지난번 총선 과정에서는 야권이 서로 경쟁했지만 내년 대선에서의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다들 뜻을 함께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는다"고 답했다. 문 전 대표는 "7년이 흘렀지만 3대 위기는 더욱 극심해졌다"며 "지난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차마 대통령을 빌 면목이 없다. 무덤에서 호통을 치셔도 할 말이 없게 됐다"고 자성했다.

그는 그러면서 "결코 이대로 허망하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국민이 피파 흘려 이룬 민주주의, 경제, 남북평화의 공든 탑을 정권교체로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대중 대통령께서 꿈꾸신 것처럼 여기 목에서 그리고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파리와 런던까지 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 전 대표는 추도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야권통합을 통한 정권교체'가 김 전 대통령의 유지였는데 라는 질문에 "지난번 총선 과정에서는 야권이 서로 경쟁했지만 내년 대선에서의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다들 뜻을 함께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는다"고 답했다.

문 전 대표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와의 만남 계획을 묻자 "저희가 어떤 방식이든 함께 힘을 모아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낼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다"며 즉답을 피했다. /뉴스

## 야3당, 우병우 특검 공조 방침

야3당은 18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각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에 공조 방침을 나타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우 수석 관련 특별감찰관 활동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이래서 우리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들자고 한 것"이라고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우병우 감찰 내용' 언론 유출 의혹을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감찰관마저 무력화시킨다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한다"고 경고했다.

이에대해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민주당에서 제안한 우병우 특검에 대해서는 아직 우상호 대표로부터 어떤 제안도 받지 않았다"면서도 "오늘 진의를 파악해서 논의를 하겠다"고 우병우 특검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상무회에서 "이제 우 수석의 불법비리의혹 사체에 대한 진실규명은 검찰에 의해서도, 특별감찰관에 의해서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남은 길은 상설특검법에 따라 우병우 특검을 실시하는 것 뿐"이라고 특검 공조 입장을 나타냈다. /뉴스